

주간 통일정세

2016-12

Contents

I. 북한동향

1. 핵문제 및 외교안보
2. 대내 정치
3. 경제
4.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先핵폐기 주장, 현실도피의 사고방식” 강변(3/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에 먼저 핵을 폐기하라는 주장은 현실도피의 사고방식이라고 22일 조선중앙통신은 주장함.
 - 통신은 이날 ‘구태의연한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과 남조선 괴뢰패당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항시적으로 벌려놓고 있는 각종 명목의 군사연습들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불러오는 근본요인”이라며 이같이 보도함.
 - 논평은 “조선반도에서 전면전쟁을 불러오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 그것은 쉽게 세계대전으로, 핵대국들 사이의 핵전쟁으로 번져지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결코 조선반도 문제 해결에서의 진전이 있을 수 없다”고 밝힘.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北매체, SLBM으로 美 워싱턴 공격하는 동영상 공개(3/26, 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26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미국의 워싱턴DC를 공격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 조선의 오늘은 26일 홈페이지에 올린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4분 11초짜리 동영상을 통해 6·25 전쟁부터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90년 초반의 1차 핵위기 등 60년 넘게 진행된 북·미간 대결구도를 소개함.

- 동영상은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잠수함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구름을 뚫고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해 미국 워싱턴DC 소재 링컨기념관 진입로를 타격하는 장면을 담았으며, 동영상 배경에는 “미제가 움쩍하기만 하면 주저 없이 핵으로 먼저 냅다 칠 것”이라고 위협하는 자막을 깔았음.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북·러 2월 협정으로 탈북민 강제송환 가능성 커져”(3/22, 미국의소리)
 - 지난달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정부간 협정으로 탈북민의 강제송환 가능성이 커졌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러시아의 활동가를 인용해 22일 보도함.
 - 러시아의 인권·난민 활동가인 스베틀라나 간누슈키나는 최근 방송에 “새 협정은 불법 체류자가 난민이나 망명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본국으로 추방하게 돼 있다”면서 “탈북민 대부분이 러시아어를 못하거나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고, 스스로 난민이나 망명을 신청할 수 없어 새 협정은 사실상 탈북민 송환협정과 같다”고 말함.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 국가

- 北 김영남, 벨기에 국왕에 위로전문(3/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3일 테러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벨기에의 필립 국왕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영남 위원장은 “브뤼셀에서 일어난 야만적인 테러 공격사건들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 불행한 소식에 접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함.
- 이어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반대하는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귀국이 이번 사건의 비극적 후과(결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안정을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함.

- 北 ‘핵탄경량화·탄도로켓 대기권 재돌입 기술 보유 및 신형 대구경 방사포·반탱크 유도무기 체계’ 등 첨단 전략무기 과시 및 “이제 더는 미국 땅은 안식처가 아니다”고 ‘美 본토 핵공격’ 위협(3.20, 중앙통신·노동신문)
- 일본 대표의 ‘성노예제도’ 부정 및 韓日 ‘위안부 합의’에 반하는 발언들은 “국제무대에서 성노예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가로막고 특대형 과거 죄악을 묻어버리려는 속심”이라며 ‘올바른 사죄, 성근한 배상’ 촉구(3.20,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3월 20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 공항에서 UAE 항공사 여객기(‘플라이두바이’ 소속) 추락사고(3.19)’ 위문 전문(3.20,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 3월 20일 이란 한산 루하니 대통령에게 ‘이란의 새해’ 축전(3.20,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 3월 20일 튀니지 베지 카이드 에셉시 대통령에게 ‘튀니지 국경절’ 60주년 축전(3.20, 중앙통신)
- 러시아 주재 北 대사관, 3월 17일 ‘北-러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67주년 연회 마련 및 러시아 외무성·원동발전성·국가회의·국회·정당·기관 일꾼 등 초대(3.20, 중앙통신)
- ‘미제의 핵전쟁불장난 소동으로 한반도 정세가 핵대결의 도가니 속에 말려들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발전을 몰아온 장본인은 미국’이라며 ‘원수들이 건드린다면 핵수단을 포함한 군사적 타격수단들을 동원하여 성렬적 불세례를 안길 것’이라고 위협(3.21, 중앙통신·노동신문)
- 美 핵항공모함 등 부산항 입항과 전략전술 무력을 동원한 韓美 연합훈련 관련 ‘정신적 약자의 허세이고 비참한 임종에 다다른 자의 단말마적 발악’이라며 ‘미제와의 전면전쟁에 철저히 준비해왔다’고 주장(3.21,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선노동당 중앙위, 3월 21일 라오스인민혁명당 창건 61돌 즈음 同國 黨 중앙위 앞으로 축전(3.21,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선수단(단장: 김경호 아시아태권도연맹 위원장), 3월 21일 제8차 아시아태권

- 도선수권대회(카자흐스탄) 참가차 평양 출발(3.21,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 3월 21일 작별 방문한 駐北 몽골대사와 담화(3.21, 중앙통신)
-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 주범은 ‘라자로 그룹’이라는 10여개 보안업체들의 발표를 언급하며 ‘미국의 北 해킹설이 완전한 날조품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게 되었다’며 ‘오바마는 추가제재를 선포한 대통령행정명령을 즉각 취소하고 공화국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3.22, 중앙통신)
- 주북 러시아 대사(알렉산드르 마체고라)와 대사관 성원들, 3월 22일 ‘北-러시아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67주년에 즈음하여 국가선물관 참관(3.22,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의 ‘비핵 세계’ 구상은 “미국의 핵독점 실현으로 세계를 제패해보려는 데 있다”며 ‘핵무기 현대화 추진’ 비난 및 미국은 “세계 평화와 안정파괴의 주범, 핵군비 경쟁의 장본인”이라고 주장(3.23,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은 ‘우리(北)를 압살하고 한반도를 발판으로 주변 나라들을 제압, 東北亞 지역과 세계 제패 야망을 실현하려 한다’며 “조선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파괴하는 장본인은 미국”이라고 주장(3.23, 중앙통신·노동신문)
- 日 문부과학성의 2017년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들에 ‘독도를 일본 영토’ 표기에 대해 “새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왜곡 책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영토강탈 야망 중단과 과거청산’ 촉구(3.23, 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3월 23일 벨기에 필리프 국왕에게 브뤼셀 국제공항 등 폭탄테러(3.22) 위문 전문(3.23, 중앙통신)
- 주북 파키스탄 대사, 3월 23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파키스탄의 날’ 즈음 리수용(외무상)·박근광 등 초대한 가운데 연회 개최(3.23,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 3월 23일 주북 요르단 대사(야흐야 카라레흐) 신임장 및 요르단 국왕의 ‘김정은 선물’ 접수(3.23,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3.24)]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모든 제재결의들을 규탄 배격한다’며 ‘미국이 추종세력들과 침략전쟁연습을 벌여놓고 제재책동을 노골화하고 있는데 대해 절대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주장 및 ‘비참한 종말만 앞당길 뿐’이라고 위협(3.24, 중앙통신)
- 日 정객들의 對北발언들(도발적 언동 용인할 수 없다, 국제적 압박공세 강화해야 등) 관련 ‘상전의 반공화국 적대시책동에 합세함으로써 어부지리를 얻자는 타산이 깔려있다’고 비난하며 ‘우모하게 날뛰다면 파국적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3.24,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영남, 3월 24일 베냉공화국 대통령 당선자(빠뜨리스 딸롬)에게 축전(3.24, 중앙통신·중앙방송)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 성적 차별행위 근절을 위한 법적조치 요구’ 관련 ‘일본에서 감행되고 있는 성적 학대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국제사회의 규탄’이라며 ‘일본은 남의 인권문제에 대해 말할 자격조차 없는 나라’라고 비난(3.25,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박봉주(내각총리), 3월 25일 방글라데시 독립

45주년에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수상에게 각각 축전(3.25, 중앙통신)

- 미국이 北 신형 대구경 방사포 사격을 “단거리 미사일 발사, 유엔 결의 위반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는 “우리(北)를 계속 걸고들어 ‘국제법 위반자’라는 딱지를 붙여보려는 목적”으로 ‘미국의 핵위협·反北 정책에 대응조치 더욱 강화’ 강조 (3.26, 중앙통신)

2.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군, 대남 상륙·상륙저지 훈련…김정은 지휘(3/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 제1위원장이) 인민군 상륙 및 반(反) 상륙방어(상륙저지) 연습을 지도하시였다”며 “감시소에서 (리명수) 총참모장으로부터 연습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연습개시명령을 내리시였다”고 보도함.
- 통신은 훈련 목적에 대해 “실용적인 상륙 및 반상륙방어연습을 통하여 해군과의 협동작전 밑에 남반부(대한민국) 작전지대에서 활동하게 될 적후전선부대들과 기계화보병부대들의 신속한 남반부 작전수역에로의 해상기동과 기습적인 상륙작전전투조직 및 지휘의 현실성을 검토하고 해안차단물 극복능력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함.

■ 北김정은, 방사포 ‘최종 시험사격’ 시찰…“명중성에 대만족”(3/2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형 대구경 방사포 사격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신형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의 사격 결과를 보시고 명중성이 바늘귀를 꿰듯 대단히 정확한데 대해 대만족을 표시하셨다”며 이같이 보도함.
- 또한 통신은 이번 사격에 대해 “남조선작전지대안의 주요타격대상들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는 위력한 대구경 방사포의 실전배비(배치)를 앞둔 최종시험사격”이라고 설명함.
- 이어 김 제1위원장이 “남반부작전지대 적 대상물들에 대한 인민군대의 정밀공격능력을 비상히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훌륭한 이 방사포무기체계를 만들어낸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장의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공

로를 다시 한번 높이 평가했다”고 덧붙임.

- **北김정은, 용성기계연합기업소 시찰…“국산화 비중 높여라”(3/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용성기계연합기업소 2월11일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공장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다용도·고성능의 중장비 및 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할 것과 부속품의 국산화 비중을 높일 것 등을 지시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어 김 제1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장에서 새로 제작한 현대적인 기계제품들이 현실에서 커다란 은(성과)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것만 놓고 보아도 최근년간 우리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보도함.
 - 이날 시찰은 홍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수행했다고 전함.

- **北김정은 ‘고체연료 로켓’ 분출시험 지휘…“탄도로켓 위력 높여”(3/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대(고)출력 고체로켓 발동기(엔진) 관련 실험에 성공했다면서 “적대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조겨델(때릴) 수 있는 탄도로켓트(로켓)들의 위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함.
 - 김 제1위원장은 “로켓공업발전에서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하였다. 영원히 잊지 못할 날, 력사적인 날”이라며 “(앞으로) 원쑤(원수)들에게 무서운 공포와 전율을 안기는 국방과학기술성과들을 다계단으로 연이어 이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은 실험에 대해 “우리 식대로 새로 설계제작한 발동기의 구조안정성과 추진력을 평가하고 이와 함께 열분리체계 및 타추종체계의 동작 특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함.

- **北김정은 1분기 공개활동 26차례…62%가 ‘군사분야’(3/24, 연합뉴스)**
 -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8일까지 김 제1위원장의 공개활동은 26회로 작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으며, 1분기에 군사 분야 공개활동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는 올해 1분기에 김 제1위원장의 행적이 파악되지 않은 ‘미식별 날짜’가 21일

로 작년 같은 기간(4일)에 비해 5배 이상 많았기 때문이며, 또 미식별 날짜가 많았던 것은 최고지도자의 결단과 고도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뉴스는 설명함.

- 김 제1위원장의 공개활동을 분야별로 보면 군사 16회(62%), 경제 5회(23%), 정치 4회(16%) 순이라고 보도함.

■ **北김정은 “서울안 통치기관 짓뭇개야”…포병부대 훈련 지도(3/25,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일단 공격명령이 내리면 원쑤(원수)들이 배겨있는(박혀있는) 악의 소굴인 서울시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무자비하게 짓뭇개버리며 진군하여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25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청와대와 서울의 ‘반동통치기관’들을 격멸소탕하기 위한 인민군 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 포병대 집중화력타격연습을 지도한 자리에서 “모든 군인들을 실전능력을 갖춘 일당백의 싸움꾼으로 키우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은 이번 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로 조직됐으며 “전선대연합부대 최정예 포병부대들이 장비한 주체포를 비롯한 백수십문에 달하는 각종 구경의 장거리 포가 참가했다”고 밝힘.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김명식 전 해군사령관, 부총참모장 직함 달고 등장(3/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의 상륙 및 반상륙(상륙 저지) 훈련을 참관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김명식을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인 해군 중장 김명식 동지’라고 호명함으로써, 지난해 경질됐던 북한 김명식 전 해군사령관이 부총참모장 직함을 달고 1년여 만에 복귀한 사실이 확인됨.
- 김명식이 공식석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해 2월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김명식의 경질 사유로 어뢰가 장착돼 실전 배치된 해군 어뢰정을 분실했다는 설과 비리 때문이라는 설 등이 제기됨.

- **北, 원유정제시설 개선사업 추진…박봉주 총리 시찰(3/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박봉주 내각 총리가 락원기계연합기업소와 봉화화학공장을 현지에서 료해(과약)했다”며 “봉화화학공장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일부 생산공정 개선(개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대책이 토의됐다”고 보도함.
 - 이어 박 총리가 “락원기계연합기업소, 봉화화학공장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70일 전투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는 노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 일꾼들을 고무했다”고 덧붙임.

- **“박춘일 주이집트 북한대사, 안보리제재 따라 추방될 듯”(3/22, 자유아시아방송)**
 -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따라 이집트에서 추방될 수 있다고 UPI통신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을 인용해 보도함.
 - 익명을 요구한 한 이집트 소식통은 방송에 박 대사가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창광무역)의 이집트 지부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KOMID의 핵심인물로서 무기 밀거래를 비롯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말함.

- **“北 전직 외교관, 탄자니아서 위조여권 사용하다 추방”(3/2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전직 외교관이 탄자니아에서 수차례 위조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돼 추방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탄자니아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함.
 - 방송은 “탄자니아 이민국이 위조여권을 이용한 불법 출입국 혐의로 북한 국적 강성국(58) 씨를 지난달 23일 탄자니아 공항에서 체포한 뒤 추방 및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함.
 - 방송은 “(강씨가 귀국 후에도) 최소한 4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이름과 다른 생년월일이 기재된 여권들을 이용해 탄자니아를 드나들었으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민국이 수사를 벌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북한, 동해로 단거리 발사체 5발 발사…사흘만에 또 무력시위(3/21, 연합뉴스)**
 - 합동참모본부는 21일 “북한이 오늘 오후 3시 19분부터 4시 5분까지 함경남도 함흥 남쪽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단거리 발사체 5발을 발사했다”고 밝힘.
 -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는 약 2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뉴스는 보도함.
 - 군 당국이 발사체의 정확한 기종을 분석 중이지만 사거리로 미뤄 신형 300mm 방사포인 것으로 추정되며, 단거리 미사일 KN-02의 개량형일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전함.

- **美매체 “北, 지난주 SLBM 지상 사출실험”(3/23, 워싱턴프리비컨)**
 - 북한이 지난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지상 사출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23일 북미 보수성향 온라인매체인 워싱턴프리비컨이 보도함.
 - 매체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 16일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의 지상 시설에서 현재 개발 중인 SLBM ‘KN-11’의 사출 실험을 실시했다고 전함.
 - 이에 대해 빌 어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정보 문제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고 전함.

- **美38노스 “北 미사일탄두 재진입 모의시험 남포 잠진서 실시”(3/24, 38노스)**
 -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즈와 헨리 칸은 23일(현지시간)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최근 공개한 미사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모의시험은 남포 잠진 공장에서 실시된 것이라는 분석을 했다고 보도함.
 - 매체는 “북한이 공개한 모의시험 사진과 상업위성 사진을 비교·분석한 결과 ‘재진입 모의실험이 잠진 미사일 공장의 수직엔진 실험대에서 실시됐다’고 결론 내릴 만한 여러 증거가 있다”고 밝힘.
 - 매체는 잠진 미사일 공장의 시험 장소와 현장을 방문한 김 위원장의 배경은 물론 최근 재단장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시험 발사대의 크기와 방향, 지지 램프 등이 일치했다고 설명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70일 전투’ 중간점검...“냅은 사상 뿌리째 들어내야”(3/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1면 사설을 통해 “70일 전투가 앞으로 40일 남았다”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70일 전투기간 전진을 방해하는 온갖 냇은 사상요소들을 뿌리째 들어내기 위한 강한 투쟁을 벌려(벌여) 사상관점과 투쟁 기풍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타파해야 할 냇은 사상요소의 구체적인 예로 “우리 당의 공격사상을 구현해 나가는 데서 주되는 장애물은 패배주의와 요령주의, 보신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라고 지목하고 “패배주의에 빠지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열린 길로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 “눈가림식, 오분열도식 일본새(일하는 태도)와 주인답지 못한 태도, 일신의 안락만을 생각하며 맡은 일에 투신하지 않고 적극성, 대담성이 없이 조건이 보장되기만을 앓아 기다리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독려함.

- 박봉주(내각 총리), 낙원기계연합기업소·봉화화학공장 현지 요해 및 ‘70일 전투 노동자·과학자 등’ 격려(3.20, 중앙통신)
- ‘혁명의 수뇌부는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며 조선군대와 인민의 운명이고 미래’라면서 ‘70일 전투장을 원쑤와의 판가리 결전장으로 여기고 대승리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자’고 주장(3.21, 중앙통신·노동신문)
-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김일성 생일(4.15)에 즈음하여 평양에서 진행 예정(3.22, 중앙통신)
- 국가자원개발성 중앙광물자원조사단, ‘수자 유용 광물도’ 완성(3.22, 중앙통신)
- 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2015년도 농업 생산에서 모범적인 단위들(만경대 남새 전문농장 등 146개 협동농장)에 공동순회 우승기·표창장’ 수여(3.23, 중앙방송)
- ‘김정은의 여명거리 건설 선포(3.18, 보도)’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와 핵전쟁연습에 조선은 승리자의 배심안고 건설의 장엄한 포성의 대답”이라고 주장(3.23, 중앙통신)
- 국가 우표발행국, 새 우표(개별우표 2종, ‘당 제7차 대회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오늘의 시대정신 반영’) 발행(3.23, 중앙통신)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 연차총회, 3월 24일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3.24, 중앙통신)

-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창립 70돌 기념보고회, 3월 24일 김기남(黨 비서)·박춘남(문화상)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대극장에서 진행(3.24, 중앙통신)
- 김정은 저작(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발표 1돌 기념 체육부문 연구토론회, 3월 24일 청춘거리 역기경기관에서 진행(3.24, 중앙통신)
- 왕재산예술단 지방순회 첫 공연, 3월 24일 70일전투의 철야 진군이 벌어지고 있는 속에 강계에서 진행(3.24, 중앙통신)
- 출판지도국 창립('46.3.26) 70주년 기념보고회, 3월 25일 김기남(당 비서)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3.25, 중앙통신)
- 박봉주(내각 총리), 황해제철연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현지 요해 및 '강철 증산' 강조(3.26, 중앙통신)
- '김일성 생일(4.15)' 기념 만경대상 국제 마라톤경기대회, 4월 10일 진행(능라도 5월1일경기장 출발·결승점) 및 북한과 여러 나라·지역 선수 참가 등 예고(3.26, 중앙통신)
-

3.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北, 발전소 자금 모금하고도 전기공급 약속 안 지켜”(3/2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지난해 주민들에게 발전소 건설을 위한 모금을 강요하고서도 전기를 정상 공급하겠다는 약속은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북한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방송에 “당국이 올해부터 전력이 정상 공급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난해) 주민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발전소 자금을 모아 바쳤다”며 “하지만 청진시 1선도로(국도) 주변에만 전기를 주고 있을 뿐 주민 지역

-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깃불을 못 보고 있다”고 전함.
- 이 소식통은 “지난해 구역마다 자체발전소를 세워 전기를 생산해 지역주민들에 공급하라고 당 중앙이 각 도(道)에 지시를 내렸으나 이를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며 “그러나 당의 방침이기 때문에 감히 거스르지 못하고 모금운동에 참여했다”고 덧붙임.

■ **北, 국제사회 제재에도 “전반적 경제 활성화” 주장(3/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조선의 자강력’이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활력의 피를 받은 생명체처럼 나라의 전반적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우리를 고립압살하기 위해 ‘제재결의’ 2270호를 조작해내고 반공화국모략소동에 미쳐 날뛰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눈깔이 뒤집히게 온 나라의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자력자강의 철야진군이 다그쳐진다”고 주장함.
- 신문은 그러면서 지난달 7일 발사한 ‘광명성4호’나 1월1일부터 운행한 지하철동차 ‘붉은기’ 제작에서 ‘100% 국산화’를 이뤘다며 “원썬들의 악착한 봉쇄속에 있는, 지구상의 가장 극악한 조건에 있는 나라가 놀라운 힘을 보여준 것”이라고 자찬함.
- 또한 신문은 ‘자강력제일주의’가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게 하고 조국을 강성번영의 령마루(고개 꼭대기)에 우뚝 올려세우는 만복의 전략”이라면서 “우리의 자강력 제일주의는 곧 과학제일주의”라고 규정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2월 북중교역 5% 증가…“北 미사일 발사 영향 없어”(3/23, 연합뉴스, 미국의소리)**

-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북한과 중국 간의 정상교역은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5%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23일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북·중간 2월 교역액은 3억2천344만 달러(약 3천750억 원)로 지난해 2월보다 4.6% 증가했고,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1억 6천193만 달러(약 1천880억 원)로 2.48% 증가했으며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1억 6천151만 달러(약 1천875억 원)로 6.91% 늘어났다고 뉴스는 전함.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월 북·중 무역통계를 보도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 북한과 중국 간 교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함.

■ 유엔, 북한 건설한 나미비아 탄약공장 조사(3/24, 미국의소리)

- 북한이 나미비아에 건설한 탄약 공장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위배되는지 유엔이 조사에 나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 관계자는 유엔이 탄약 공장 건설 시기와 나미비아 정부의 협력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나미비아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올해 콩 재배면적 1만여 정보 확장 등 “콩 농사 장려” 및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70일 전투 진입 이래 새 기준, 새 기록 돌파(3.1 하루, 주체철 생산계획 190% 초과 완수 등)” 보도(3.20, 중앙통신)
- 혜산-삼지연 넓은 철길건설, 철길노반 형성과 소 구조물공사 90%이상과 웅벽 쌓기 및 다리기둥·기차굴 확장공사는 85%계선 돌파 보도(3.21, 중앙통신)
- 북창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남덕탄광, 매일 생산 계획보다 600여 톤의 석탄 초과 생산(3.22, 중앙방송)
- 「세계 기상의 날(3.23)」 즈음 ‘북한은 기상관측과 예보·통보사업의 현대화·과학화·정보화가 추진되어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명 재산보호에 기여 한다’고 선전(3.23, 중앙통신)
- 린비료공업관리국 산하 광산들에서 3월에 매일 계획 160% 이상 수행 결과 21일 현재 3월 생산계획 105% 결속과 각지 과수농장들의 20여일간 총 계획량의 75% 이상 대용농약 생산 (3.23, 중앙통신)
- 전력공업부문·석탄공업부문·기계공업부문 등 인민경제 중요부문, 70일 전투 한 달 목표 초과 달성(3.25, 중앙통신)
- 김책공업종합대학 재료연구소 연구집단의 ‘내고온 농질산강 국산화 실현 및 극저탄소 특수 불수강 생산 돌파구 마련’ 선전(3.26, 중앙통신)

4.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대북제재 소식 퍼지면서 北 장마당 물가 급등”(3/25,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소식이 북한 내에 알려지면서 사재기가 기승을 부려 장마당의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중국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 이 소식통은 방송에 “함경북도 나선지방 주민들을 통해 장마당의 물가를 직접 확인했다”면서 “유엔의 대북제재 소식이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주민들 속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장마당에서 쌀과 기름값이 오르고 있다”고 말함.
 - 소식통은 “강도 높은 대북제재 소식을 알게 된 주민들이 ‘중국까지 막히게 되면 살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사재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北매체 “2013년 라오스서 복송된 9명 모두 대학생 됐다”(3/22, 메아리)
 - 북한 민간단체 아리랑협회가 운영하는 매체 ‘메아리’는 22일 “남조선 정보원의 조종을 받은 인신매매군(매매꾼)들에 의해 라오스를 통해 남조선으로 끌려가다가 조국에 품에 안긴 9명의 청소년들도 자기의 희망에 따라 공부를 마음껏 하고 있다”고 보도함.
 - 이 매체에 따르면 류철룡, 리광혁, 장국화, 로정영 등 4명이 금성제1중학교에서 4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이번에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평양료리(요리)학원 등의 입학시험에 합격했다고 전함.
 - 또한 양강도의 영재학교인 영웅혜산제1중학교를 졸업한 문철(평양건축종합대학)과 정광영(김책공업종합대학), 류광혁(평양인쇄공업대학), 박광혁(김형직사범대학)이 지난해 대학입시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고, 백영원은 함흥사범대학에 재학 중이라고 전함.
- 케네스 배, ‘北 억류’ 비망록 5월 초 출간(3/23, 미국의소리)
 - 2012년 11월 북한에 억류됐다가 2년 만에 풀려났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체포에서 석방까지 사연이 담긴 비망록이 오는 5월 초 나온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함.

- 세계적인 출판사인 하퍼콜린스 측은 방송에 “케네스 배 씨의 책 ‘잊혀지지 않은 (Not Forgotten)’이 오는 5월 3일 발간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배씨는 출판사 홈페이지에 실은 영상을 통해 “제가 북한에 있는 동안 전 세계에서 450여 통의 편지를 받았다”며 “그들은 제가 잊혀지지 않았다고 말해 주었다”고 책 제목의 배경에 대해 설명함.
- 이어 출판사 관계자는 “배씨가 (선전물을 흠친 혐의로 최근 북한에서 15년형을 선고받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워비어 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곧 밝힐 예정”이라고 전함.

■ **北 “억류 미국인, 南모락군 지령받고 간첩행위 인정” 주장(3/25, 연합뉴스)**

-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가 2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첩 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하며 사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김동철은 2015년 10월 2일 나선경제무역지대에서 매수된 자료부터 조선의 핵 관련 비밀자료와 군사비밀자료, 내부 실태자료가 입력된 USB 기억기와 문서를 넘겨받다가 현장에서 체포돼 지금까지 법 기관의 조사를 받았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김 씨는 기자회견에서 “남조선 정보 모락꾼들의 지령을 받고 공화국의 당, 국가, 군사 비밀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그들에게 넘겨주는 간첩 행위를 감행했다”고 밝힘.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北, 작년 국제특허 출원 6건…한국의 0.04%”(3/22, 미국의소리)**

- 북한이 지난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출원한 국제특허가 6건에 그쳤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함.
- 방송은 WIPO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면서 6건이라는 수치는 한국의 0.04%에 불과하다고 전함.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국제특허를 출원한 기술은 제약과 금속공학, 표면처리기술, 화학공약 등 분야라고 방송은 전함.

■ “北 양강도 기차역서 ‘김정은 개XX’ 낙서 발견”(3/2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양강도의 한 기차역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난하는 낙서가 발견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북한 현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방송에 “지난 1월 1일 양강도 삼수군에 위치한 포성역에서 김정은을 비하하는 낙서가 발견돼 사법당국이 지금까지 필체조사를 하고 있다”며 “낙서는 평양 급행열차가 오가는 포성역 건물 김일성 초상화 밑에 있었다”고 전함.
- 이 소식통은 “다른 사건이면 몰라도 김정은 비난 낙서사건은 조심스러워 이제야 전하게 됐다”면서 “낙서는 검은색 글씨였는데 ‘김정은 개XX’라고 쓰여 있었다”고 설명함.

■ 北 “고교 졸업생 3만 명 입대 탄원” 주장(3/25, 조선중앙통신)

- 우리 군의 북한 주요시설을 겨냥한 ‘정밀타격훈련’에 반발한 북한의 고등학교 졸업생 3만여 명이 입대 탄원서를 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통신은 “조선혁명의 최고수뇌부, 당중앙위원회 집무실을 파괴하기 위한 극악무도한 정밀타격 훈련을 감행하였다는 사실은 조선의 열혈청춘들의 천백배 복수심을 분출시키고 있다”면서 “천인공노할 만행에 접한 평양시 안의 고급중학교(고등학교) 졸업생 3만여 명이 25일 현재 인민군대 입대를 열렬히 탄원해 나섰다”고 밝힘.

- 北, 3월 24일 인민문화공전에서 ‘세계 결핵의 날’ 행사 진행(3.24, 중앙통신)
- 봄철 청소년적십자나무심기행사, 3월 24일 평안남도 평원군 삼봉리에서 진행(3.24, 중앙통신·중앙방송)
- 왕재산예술단, 3월 24일 평북 강계에서 지방순회공연 시작(3.25, 중앙방송)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전문가 “北, 5차 핵실험 6~8주내 감행 가능성 충분”(3/22, 연합뉴스)**
 - 미국 의회조사국(CRS) 전 연구원인 래리 닉시 박사는 "북한 핵실험장의 관련 활동 증가를 보여주는 위성사진 정황을 보면 향후 6주에서 8주 사이 북한이 5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그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면 김정은은 미국과 어떤 협상에서도 매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며 현재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협상보다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라고 분석함.
 - 하지만 이런 관측과 달리 강력한 대북 제재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북한 당국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나 기술적 준비 부족 등의 문제로 선불리 추가 도발에 나서지는 못하리라는 분석도 있다고 RFA는 전함.
- **“북한, 5월까지 미사일 발사시험 지속할 듯”〈미 전문가〉(3/22, 연합뉴스)**
 - 미국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원은 21일(현지시간)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연구원의 말을 빌려 북한이 이날 동해 상에 발사한 5발의 KN-09 '신형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300mm 신형 방사포, 최대 사거리 200km)는 "기술 역량 면에서 일부 진보"를 보여주며, 이런 도발적인 발사시험은 5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봄.
 - 베넷은 또 북한은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지난 1980년 이래 처음으로 5월에 개최되는 제7차 노동당대회 시기까지 지속할 것이며, 특히 북한 지배층은 이 대회를 앞두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야 하므로 이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함.
 - 그는 대포동 2호 같은 대형 미사일은 위협적인 존재로 언론에 부각되면서 눈에 띄는 표적인 데 반해 위험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KN-09 방사포가 오히려 "유사시 한국 내 미군 공군기지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함.

■ **美매체 “北, 지난주 SLBM 지상 사출실험”(3/23, 연합뉴스)**

- 미 보수성향 온라인매체인 워싱턴프리비컨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 16일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의 지상 시설에서 현재 개발 중인 SLBM 'KN-11'의 사출 실험을 실시했다고 전함.
-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유엔이 지난 2일 북한에 대한 새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후 첫 SLBM 발사 실험임.
- 북한의 SLBM KN-11은 옛소련의 SLBM인 SS-N-6를 모방해서 개발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사거리 3천km)과 모양이 매우 유사하지만, 길이가 짧고 탄두 형태가 약간 다른 것으로 알려짐.

■ **美38노스 “北 미사일탄두 재진입 모의시험 남포 잠진서 실시”(3/24, 연합뉴스)**

-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즈와 헨리 칸은 23일(현지시간) 미 존스 홉킨스대 한미연구소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최근 공개한 미사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모의시험은 남포 잠진 공장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주장함.
- 38노스는 "북한이 공개한 모의시험 사진과 상업위성 사진을 비교·분석한 결과 '재진입 모의실험이 잠진 미사일 공장의 수직엔진 실험대에서 실시됐다'고 결론 내릴 만한 여러 증거가 있다"고 밝힘.
- 평양 인근 남포시 잠진리에 위치한 이 공장은 북한에서 가장 오래된 탄도 미사일을 생산하는 곳으로, 북한이 열병식 때 선보이는 전략 미사일도 이곳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짐.

■ **美 전문가 “北 개발주장 고체로켓, 다단계발사체 맨 끝단일것”(3/25, 연합뉴스)**

- 북한이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고체연료추진 로켓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라기보다는 다단계 발사체의 맨 끝단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옴.
-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SS)에서 활동하는 미사일전문가 마이클 엘레먼 선임연구원은 24일(이하 현지시간)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이 개최한 간담회에서 "비교적 느린 모습으로 길게 이뤄지는 연소 형태"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함.
- 그는 여러 번의 비행 시험을 거쳐야만 신뢰할만한 고체연료로켓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아직 고체연료로켓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면서도 "북한이 고체연료로켓 기술 획득을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함.

■ **방위성 연구소 "北핵무기 소형화·탄두화했을 가능성"(3/25, 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 소속 방위연구소는 25일 발표한 '동아시아 전략개관 2016'에서 "북한 미사일의 핵탄두 탑재 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도 많지만 핵무기에 대해서는 이미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르고 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적었음.
- 이어 방위연구소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잠수함 기술과 수중 발사 능력을 향상해 장래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스템을 배치하면 기존 지상이동식발사형 미사일의 능력 향상과 함께 북한 핵전력의 잠재력이 한층 높아질 위험성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임.

나. 미·북 관계

■ **'北노동자 외화벌이 차단'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13722호(3/20,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발동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이 13722호라는 번호를 부여받음. 이로써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008년 6월의 13466호, 2010년 8월의 13551호, 2011년 4월의 13570호, 2015년 1월의 13687호에 이어 모두 5개로 늘어남.
- 새로운 행정명령 13722호는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을 이행하기 위한 일종의 '시행령'이면서,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띠고 있음.
- 이번 행정명령에는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으며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 (sectoral ban)이 적용됐으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포함돼 있음.

■ **北, 한미연합훈련 또 비난... "정신적 약자의 허세" 주장(3/21, 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장송곡을 울리며 멸망길을 재촉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결전의 시각이 닥쳐온다면 병사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 인민이 너도나도 조국통일 성전에 떨쳐나 단숨에 남녘땅을 해방하고 한라산에 공화국기를 꽂을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중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정신적 약자의 허세이자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거듭 비난함.

- 신문은 미국을 겨냥해서는 "대양 건너 가증스러운 악이 소굴에서, 위선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징벌의 활화산을 터쳐(터뜨려) 침략의 근원을 들어 내고야 말 것"이라고 밝힘.
- 또 "우리는 미제와의 전면전쟁에 철저히 준비해왔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혁명 무력은 최강이며 나라의 모든 곳이 요새화되었다. 우리 공화국이 철용성이라면 미국 땅덩어리는 삶은 호박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함.

■ 미국방부 "北 도발 삼가라...미군, 항상 경계태세 유지"(3/22,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5발을 쏘며 또다시 무력시위를 한 것과 관련, 즉각적인 도발 중단을 촉구함.
- 빌 어번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대해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 5발을 발사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군사 행동과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어번 대변인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삼가고(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함.

■ 미재무부,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또 발령(3/23, 연합뉴스)

-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자국 금융기관에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다시 발령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함.
- 주의보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2270호)와 대통령 행정명령(13722호)에 따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금융, 상업 거래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힘.
- 이번 조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달 북한을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임.

- **北, 美스트라이커부대 훈련에 민감 반응…“침략기도” 주장(3/25, 연합뉴스)**
 -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이 이번에는 미군 스트라이커 부대 훈련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임.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침략의 사나운 발톱을 드러낸 독수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합동군사연습에 적용되는 모든 훈련이 공화국의 전략적 중심과 중요거점들에 대한 신속한 기동과 전개, 정밀타격과 기습점령 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것으로 일관되고 있다"고 주장함.
 - 노동신문은 미 육군의 신속기동부대인 스트라이커 부대는 "상대방의 중심에 대한 타격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다"면서 "지난 시기 스트라이커 려단(여단)이 남조선에서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실탄 사격훈련이니 뭐니 하는 것들을 뻔질나게 벌려(벌여) 놓았지만, 이번처럼 시가지 점령훈련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함.

- **美차관보 “北붕괴 전략 아냐…한국 닮은 평화통일 한반도 선호”(3/26, 연합뉴스)**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대북 정책 기조와 관련해 "북한의 붕괴는 우리의 전략이 아니다"라며 "한국과 닮은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가 우리에게 훨씬 호소력이 있다"고 밝힘.
 - 2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정치외교 전문 정보지인 '넬슨 리포트'에 따르면 러셀 차관보는 지난 22일 독일 베를린 헤르티 공공정책학교에서 열린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만일 우리가 북한 붕괴를 전략으로 삼았다면 우리의 행동은 훨씬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함.
 - 러셀 차관보는 "미국과 중국은 북한 문제에 관한 한 매우, 매우 공통된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는 (대북 접근과 관련해) 어느 정도 위기를 감수할 것인지, 또 얼마나 압력을 행사할 것인지 등의 기술적 문제에서 갈라지고 있다"며 "중국도 바로 이웃 국가로서 복잡하게 뒤얽힌 현 상황에 병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주장함.

- **北매체, SLBM으로 美 워싱턴 공격하는 동영상 공개(3/26, 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26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미국의 워싱턴DC를 공격하는 동영상을 공개함.
 -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 조선의 오늘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4분 11초짜리 동영상은 통해 6·25 전쟁부터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90년 초반의 1차 핵위기 등 60년 넘게 진행된 북·미간 대결구도를 소개함.

- 동영상은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잠수함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구름을 뚫고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해 미국 워싱턴DC 소재 링컨기념관 진입로를 타격하는 장면을 담았으며, 엄청난 폭발력에 충격을 받은 인근 의사당 건물이 무너지고 성조기가 화염에 휩싸이는 모습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했음.

다. 중·북 관계

■ “中 산둥성 잉커우항, 북한 선박 입항 전면 금지”(3/20, 연합뉴스)

- 중국 동북지방 제2의 항만도시인 랴오닝(遼寧)성 잉커우(營口)시가 최근 북한의 모든 선박 입항을 금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지난 2일 채택된 대북 제재결의에서는 북한으로부터 석탄·철광석 등 광물자원 수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핵·미사일 개발과 관계없는 '민생 목적'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에 따라 잉커우 등의 항구에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에도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의 입항이 가능해 '제재의 구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음.
- 그러나 항만 관계자 및 북·중 무역상 등에 따르면 잉커우 상구에서는 항만 당국이 지난 16일 항구 측에 북한의 모든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라는 구두 통보가 있었음.

■ “中, 부처별 유엔 대북제재 이행단계 돌입”(소식통)(3/21, 연합뉴스)

- 베이징(北京)의 대북소식통은 21일 "중국이 부서별로 대북제재안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중국 측도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주지는 않지만 이행 단계에 있다는 점은 밝히고 있다고 전함.
- 이 소식통은 '이행 단계'의 의미와 관련, 지방에 공문이 내려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이행 방식 정비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 한 소식통은 "과거에는 엄격하게 이행한다는 수준이었지만 '엄격', '전면' 등 수식어가 늘어난 것은 크게 달라진 점"이라면서 중국이 결의안을 진지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함.

- **中, 북·중 전자상거래 사이트 첫 승인…“북한 개방 유도”(3/21, 연합뉴스)**
 - 중국 상무부는 최근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의 진저우(金州)신구에 주소를 둔 북·중 전자상거래 사이트 '비취왕(必妥網·www.b2ow.com)개설을 승인하고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1일 밝힘.
 - 상무부는 해당 사이트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보다 7개월 앞선 북한 승인과 이에 근거한 중국 승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설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사이트를 통해 "조선(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며 러시아, 동남아 각국과의 국제교역 플랫폼으로도 활용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사이트만 개설됐을 뿐 구체적인 교역 서비스 제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북한이 해당 사이트를 활용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로 막힌 대중(對中) 수출길을 다시 뚫으려 할지 모른다는 조심스런 우려도 머리를 들고 있음.

- **中, 北 단거리발사체 발사에 “안보리 결의안 위반 말아야”(3/21,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북한이 21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5발을 쏘며 또다시 무력 시위를 한 데 대해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비판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현재 한반도 정세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화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유관 당사국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함으로써 정세의 대립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임.

- **2월 북중교역 5% 증가…“北 미사일 발사 영향 없어”(3/23, 연합뉴스)**
 -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북한과 중국 간의 정상교역은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5%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다만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 강행됐던 1월의 교역규모(3억8천800만 달러)와 비교해서는 2월 교역량이 15% 이상 대폭 줄어들었음.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월 북·중 무역통계를 보도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북한과 중국 간 교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했으며, 북한의 제4차

의 중국 지방정부가 안보리 제재 결의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대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함.

- VOA에 따르면 중국 훈춘시는 지난 2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나선시 당국과 함께 훈춘~나진(북한)~상하이 항로를 적극 개발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힘.
- 방송은 또 훈춘시 상위 기관인 지린성 정부가 지난 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관광업 진흥 계획안에서 북한 및 러시아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함.

■ “중국인, 핵실험 이후 北에 등 돌린다”〈글로벌타임스〉(3/24, 연합뉴스)

- 북한의 핵실험과 북·중 접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잇따른 범죄로 북한에 대한 중국인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고 중국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24일 보도함.
- 신문은 단둥(丹東)에서 유람선을 타고 관찰한 북한의 압록강 변 생활상과 이를 지켜본 중국인 유람선 탑승객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전했다. 압록강 너머 암울한 풍경, 칙칙한 단층 농가, 잔뜩 경계하는 북한 주민,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는 북한 경비병의 모습을 본 중국인들은 대개 연민과 조롱의 감정을 표현했다고 전함.
- 글로벌타임스는 그러나 중국이 개혁개방 30년에 급속한 경제 발전을 하였지만, 소련과 동구의 붕괴에도 구체제를 고집한 북한은 경제·외교적인 어려움이 가중돼온 상황에서 북·중 국민 간에 틈이 벌어졌다고 전함.

라. 일·북 관계

■ 방위대 찾은 日 아베 “집단지위권 철저히 준비해야”(3/21,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1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관련 법이 오는 29일 시행되는 만큼 자위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집단자위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자국이 공격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을 할 수 있는 권한임.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横須賀)시에 있는 방위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새로운 임무에서도 현장의 대원들이 안전을 확보하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경우를 상정해 용의주도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북한의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 등을 거론하며 "안보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냉엄한 현실에서 눈을 돌릴 수 없다"고 지적함.

- **아사히 “日 조선학교 보조금 중단은 약자 괴롭히기”(3/21, 연합뉴스)**

 -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이후 제재의 하나로 일본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은 잘못이며 약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에 불과하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지적함.
 - 아사히는 이날 '어린이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집권 자민당 등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론이 나오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이미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며 이같이 밝힘.
 - 이어 "조선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핵개발이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책임이 없다"며 "북한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일본에 사는 어린이들의 학습터전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비판함.

- **日방위성 청사에 패트리엇 상시배치…“北미사일 대비 도쿄 방어”(3/22, 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최근 잇따라 탄도미사일 등을 시험발사함에 따라 도쿄(東京) 이치가야(市谷)의 방위성 내에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전함.
 - 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왕궁은 물론 총리관저 등 정부 중추 기관이 밀집해 있는 도쿄 도심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방위성은 수도권 기지에 있는 PAC3 부대를 내년 중 방위성 내로 전환배치할 방침임.
 - 항공자위대는 지난 18일 방위성에 PAC3를 배치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경계 태세를 구축하고 있음.

- **日여당서 ‘北 미사일기지 타격론’ 제기…방위성은 신중(3/24, 연합뉴스)**

 - 일본 집권 자민당 국방부회(국방정책 담당 의원 모임)는 24일 회의를 갖고 북한이 최근 잇따라 탄도미사일 등을 시험발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적(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기지 공격능력 확보가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마쓰 히로시(今津寛) 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은 "북한은 동시에 미사일 여러개를 쏠 능력이 있다. 발사 전에 (북한 기지를) 타격하는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함.
 - 이에 대해 회의에 참가한 방위성 관계자는 "이전부터 법제상으로도,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자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으나, "다만 자위대는 종래부터 적기지 공격에 적합한 장비체계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한 장비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함.

■ **日정부 "北도발적 언동 용인못해…추가도발 말라"(3/24,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적 언동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주의 촉구와 비난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추가 도발 행위를 절대 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함.
- 스가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로서는 어떤 사태에도 대응할수 있게끔 미국, 한국과 확실히 협력하고, 대화와 압력, 행동 대 행동의 (대북)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부연함.
- 그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자 "한국 정부가 제대로 경계하고, 대응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임.

■ **日방위상 "北미사일 경계 태세 유지"(3/25, 연합뉴스)**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엔진 실험을 성공했다고 밝힌데 대해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25일 말함.
-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의 경계감시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함.
- 나카타니 방위상은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쉽게 발사할 수 있다"며 "북한은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성능 향상, 추가 기술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고 우려함.

■ **아베 "냉엄해진 안보환경 대처에 안보관련법이 베스트"(3/25,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5일 다음주 시행되는 안보관련법이 최근 북한의 위협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데 최고라고 밝힘.
- 그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한층 냉엄해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난해

마련한 평화안전법제가 베스트(최고)"라고 말함.

- 아베 총리는 야당의 안보관련법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 미일이 전보다 확실하게 연대할 수 있었다"며 "이제와서 폐지한다면 모처럼 강화된 미일동맹의 유대가 크게 훼손되고, 우리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반박함.

■ **日정부, 지자체에 '조선학교 보조금 집행 자제' 요청한다(3/26,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제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전함.
-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조치의 하나로, 이르면 이달 내로 하세 히로시(馳浩) 문부과학상 명의로 지자체에 자제요청 통지문을 보낼 예정임.
-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만큼 정부의 개입에 대한 지자체 및 조선학교측의 대응이 주목됨.

■ **日 방북시 재입국 금지 대상 200여명 추가…총 45명선(3/26, 연합뉴스)**

-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에 따라 북한을 방문한 이후 일본 재입국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대상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 등 22명 이외에도 23명 가량 추가됐다고 교도통신이 26일 전함.
- 추가된 사람은 대북 불법 수출입에 관여했다가 적발돼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며, 이 가운데는 한국과 중국 국적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 이로써 방북시 재입국 금지 대상자는 45명가량으로 늘었으며, 조선총련 간부인 허종만 의장, 남승우 부의장 등 5명은 북한 조선노동당 대의원이어서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최고인민회 등북한의 주요행사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마. 러·북 관계

■ **러시아 "경제적 부담에도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할 것"(3/21, 연합뉴스)**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데니소프 주중 러시아 대사는 21일 (현지 시간) 자국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이 그동안 북한과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오던 러시아에 경제적 측면에서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결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북한의 주요 (협력) 상대국은 이 나라와 사실상 아무런 실질적 관계도 없는 미국이 아니라 북한의 이웃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이라면서 "우리에게 결의 이행은 쉽지 않은 문제일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런 문제"라고 주장함.
 - 그는 그러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그러한 대응(제재 결의)을 결정했고 일단 결의가 채택된 이상 그것을 지켜야 하며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함.
- **"북·러 2월 협정으로 탈북민 강제송환 가능성 커져"〈VOA〉(3/22, 연합뉴스)**
- 지난달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정부간 협정으로 탈북민의 강제송환 가능성이 커졌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러시아의 활동가를 인용해 22일 보도함.
 - 러시아의 인권·난민 활동가인 스페틀라나 간누슈키나는 최근 VOA에 "새 협정은 불법 체류자가 난민이나 망명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본국으로 추방하게 돼 있다"면서 "탈북민 대부분이 러시아어를 못하거나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고, 스스로 난민이나 망명을 신청할 수 없어 새 협정은 사실상 탈북민 송환협정과 같다"고 말함.
 - 새 협정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불법 입국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30일 안에 추방하는게 핵심이라고 함.
- **"제재대상 北선박, 러시아 입항 거부로 되돌아가"〈VOA〉(3/24,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이 러시아 항구에서 입항을 거부당해 북한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함.
 - VOA는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의 지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4일(이하 한국시간)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에 도착했던 북한 선박 희천호가 23일까지 접안을 하지 못한 상태로 항구로부터 1Km 떨어진 바다에 머물렀다"고 전함.
 - 희천호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 내 입항이 금지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27척 중 한 척임.

바. 기타

- **중언론 “대북제재 여파로 북한 수출품, 내수시장이 풀려”(3/21, 연합뉴스)**
 - 21일 중국 참고소식망(參考消息網)은 싱가포르 연합조보(聯合早報)를 인용해 이달 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시행에 따라 북한의 주요 수출 관료가 모두 끊어지자 곳곳에서 무역상들이 수출상품을 모두 국내 소비 시장으로 돌렸음.
 - 함경북도 소식통은 "중전에 무역상들이 어류와 농산물을 주요 수출품으로 삼아 외화벌이를 독점했으나 최근엔 (수출길이 막히자)생업을 위한 도매로 돌아섰다"며 유엔 제재가 주민들에겐 오히려 복을 가져다 줬다고 말함.
 - 참고소식망은 "북한 주민들이 유엔의 대북제재가 최소한 올 여름까지는 계속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고가의 생선을 싼 값에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함.

- **캄보디아, 北에 ‘거리두기’…핵실험 우려 안보리결의 이행촉구(3/21, 연합뉴스)**
 -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으로 알려진 캄보디아와 북한 사이에 이상기류가 나타나고 있음. 호르 남흥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21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신화통신이 춤 순리 캄보디아 외교부 대변인을 인용해 보도함.
 - 남흥 부총리는 이날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하마치 마사카즈(濱地雅一) 일본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을 만난 자리에서 "캄보디아는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 시키거나 상호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도록 북한에 촉구하고 있다"고 말함.
 -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캄보디아 방문은 물론 훈센 캄보디아 총리의 방북 초청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짐.

- **ICAO, 北 중거리미사일 발사 ‘사전 미통보’에 경고서한(3/22,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관련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 민간 항공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제기구가 서한을 보내 공식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항공

고시보(Notice to Airmen·NOTAM)에 올려 관련국에 알려야 한다는 ICAO 협약 부속서상의 의무를 북한에 환기시킨 것으로 알려짐.

- 우리 정부는 앞서 북한의 이런 행태가 국제 민항·항해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우려를 ICAO와 선박 안전을 담당하는 국제해사기구(IMO)에 서한 등의 형태로 전달한 바 있음. ICAO가 우리 정부의 우려 표명과 자체 판단 등을 토대로 외교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며, IMO도 비슷한 조치를 할 것으로 전망됨.

■ 안보리, 선박 4척 제재 해제…“북한선원 고용않겠다 약속”(3/22, 연합뉴스)

-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선박 4척에 대해 중국인 선박 소유주가 북한 선원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가 취해져 제재 대상에서 빠졌음. 선박 소유주와 별도로 중국 당국도 서면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짐.
-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일(현지시간)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2270호) 부속서에 제재 대상으로 명시됐던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OMM) 관련 선박 31척 중 4척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함.
- 제재위는 앞으로 제재의 이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블랙리스트에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힘.

■ 유엔, 북한 건설한 나미비아 탄약공장 조사(3/24, 연합뉴스)

- 북한이 나미비아에 건설한 탄약 공장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위배되는지 유엔이 조사에 나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함.
-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16일 나미비아 정부가 북한이 자국 내에 탄약 공장을 건립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함.
- 나미비아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북한 제재 이행 감시' 전문가패널, 내년 4월까지로 기한 연장(3/25, 연합뉴스)

- 유엔은 24일(현지시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의 활동 기한을 2017년 4월 24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힘.

- 결의안에서는 전문가패널이 중간보고서를 8월 5일까지, 최종보고서를 내년 2월 1일까지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대북제재위원회가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은 내년 3월 15일로 정함.
- 또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잘 이행되도록 유엔 모든 회원국이 대북제재 위원회에 전적으로 협조하도록 함.

■ 필리핀, '대북제재 첫 이행' 진톥호 몰수 해제·출항 허용(3/25, 연합뉴스)

-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으로 지목돼 필리핀에서 몰수된 화물선 진톥호가 풀려남.
- 25일 필리핀 GMA방송 등에 따르면 찰스 호세 필리핀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2270호) 부속서에 명시한 제재 대상 명단에서 진톥호를 삭제해 이 선박을 계속 잡아둘 근거가 없다"고 밝힘.
- 진톥호는 24일 오후 필리핀 수빅만을 떠나 중국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시에라리온, 자국 국적 北 소유 선박에 주의 당부"(VOA)(3/26, 연합뉴스)

- 시에라리온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의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 가운데 시에라리온 국적을 지닌 선박에 대해 주의보를 내렸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함.
- 시에라리온 해양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주의보를 통해 북한을 겨냥하는 유엔과 유럽, 미국의 제재대상이 최근 늘었다면서 "시에라리온 국적의 (북한) 선박을 운영하는 소유주와 관리인, 등록처 직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방송은 전함.
-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명시된 북한 해운사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가운데 최근 필리핀 당국에 압류됐다 풀려난 '진톥호'를 비롯한 상당수 선박이 '편의치적'에 따라 시에라리온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짐.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합참의장 연합사령관, 美 핵항모 방문... "北도발에 강력대응" (3/21, 연합뉴스)

-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21일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FE) 연습에 참가 중인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를 방문해 북한의 도발에 맞선 한미동맹의 의지를 과시함.
- 이 의장은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토대"라며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 줄 것"을 당부함.
- 이 의장과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미국의 전략무기인 존 C. 스테니스호를 함께 방문한 것은 북한이 최근 잇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인 데 대응해 한미동맹의 북한 도발 억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참은 설명함.

■ 한미, 첫 고위급 제재협약... '전방위 대북압박' 합의(3/21,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북핵 6자회담 양국의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비롯해 대니얼 프리드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 미 재무부와 상무부의 제재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고위급 제재협약'을 열어 대북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함.
- 외교부는 이날 협약에 대해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안보리 결의(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한미를 비롯한 주요국의 독자제재,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등 3개 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대북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힘.
- 한미는 또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에서도 북한이 단·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데 대해 추가 도발시 국제사회의 보다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함.

■ 한미 해군, 동·서해서 연합훈련... 北 도발위협 대응(3/22, 연합뉴스)

- 한미 양국 해군은 독수리훈련의 하나로 22일부터 25일까지 동·서해에서 북한의 해상도발 위협에 대응한 연합 해상훈련을 한다고 해군이 밝혔음.
- 이번 훈련에는 양국 해군의 수상함과 잠수함 등 함정 50여 척과 양국 육·해·공군 항공기가 참가하며,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과 대잠수함전, 대함·대공·대잠 실사격 훈련, 항모강습단 훈련 등이 이뤄짐.

- 한미 해군은 해상전투단 훈련 종료 후 이달 26일부터 4월 초까지 진해 인근 해역에서 연합기뢰전훈련, 연합구조전훈련 등을 실시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높일 계획임.
- **미국, 한국에 무장 정찰 헬기대대 순환배치(3/22, 연합뉴스)**
 - 미국 육군이 표적 탐지와 야간 정찰 능력이 뛰어난 OH-58D 카이오와 위리어 (Kiowa Warrior) 무장 정찰 헬기대대를 한국에 순환 배치함.
 - 미 군사 전문매체 밀리터리타임스(MT)는 제18 공수군단 관계자의 말을 빌려 제82 공정사단 산하 82 항공여단 1대대 소속 카이오와 위리어 헬기와 조종사 등 병력 400여 명이 올여름 한국에 순환 배치된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함.
 - 관계자는 "교체 병력은 북한의 침공 역지를 위한 중요 임무 수행에 충분한 대비태세를 갖췄다"면서 "특히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파견되는 이 대대는 주한 미군의 훌륭한 증원 병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한미 6자수석, '한미중 3자협의' 적극 추진키로(3/22, 연합뉴스)**
 - 외교부는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간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대해 양측은 중국측이 최근 6자회담 틀내에서 3자 등 소다자 협의에 개방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에 주목했다면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해 핵심 관련국인 한미중 3국간 협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함.
 - 한미는 이날 회동에서 전날 양국의 고위급 제재협약에서 논의된 대북 압박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 북한의 유일한 선택지가 비핵화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공조를 더욱 긴밀해 해나가기로 함.
 - 또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바라하고 추가도발을 위협하는 것과 관련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한편, 도발시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함.
- **카터 美국방 "사드 배치 원칙적 합의하에 논의중"(3/23, 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국방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과 관련해 "현재 한국과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한국과 원칙적으로 그 점(사드 배치)에 합의했다"면서 "북한의 전방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한국) 전역을 방어하려는 것"이라고 밝힘.

- 본토 방어에 대해선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지상요격시스템의 숫자와 능력을 증강해 온 것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현재 지상 요격시스템을 30개에서 44개로 늘리고, 또 '킬비클'(미사일 요격체)의 성능을 개선하는 동시에 레이더를 추가로 탑재하고 있다"고 설명함.
- 카터 장관은 이어 오늘 밤 당장 전투가 벌어져도 승리할 수 있다는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의 정신을 거론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매우 중요하고 굳건하다"고 강조함.

■ 안전처-미 국토안보부, 재난·테러대응 협력 강화키로(3/24, 연합뉴스)

- 국민안전처는 23일(워싱턴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국토안보부와 장관 회의를 열고, 재난·테러 대응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이날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을 만나 재난관리와 대테러 긴급구조·지원분야 협력을 위한 대화채널 구축과 교류확대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함.
- 한미 양국간 장관급 재난총괄기관장 회의는 이번이 처음임.

■ “北도발시 강력 응징”…한미 해군, 서해수호 연합훈련(3/25, 연합뉴스)

- 해군은 25일 '제1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다 산화한 전우들의 영해사수 의지를 기리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하고자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을 함.
- 특히 이날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 서해에서는 2함대사령부 주관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확고한 응징의지를 과시함.
- 한미 해군은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의 특수전부대를 바다에서 격멸하는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훈련, 대잠전훈련, 함포와 폭뢰 실사격훈련 등 실전적 훈련을 통해 북한의 해상도발에 대응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높임.

나. 한·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한·일 관계

- **日방위상 “한미와 연대해 北 정보수집 분석·경계 계속”(3/21, 연합뉴스)**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21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5발을 쏜 것과 관련해 "미국, 한국과 긴밀히 연대해 정보 수집, 분석, 경계감시를 계속하겠다"고 말함.
 - 일본 언론은 이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소식을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인용해 신속하게 보도함.
- **“정부, 일본교과서 위안부 기술 후퇴 日정부에 시정요구”(3/23, 연합뉴스)**
 -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흐린 최근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우려를 표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23일 알려짐.
 - 한국 정부 당국자는 전날 열린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교과서의 위안부 기술 변화에 대해 "우려 표명과 시정 요구를 포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함.
 - 18일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교 교과서 중 시미즈(清水) 서원 교과서는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군에 연행돼'라는 종전 교과서의 표현을 '식민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라는 표현으로, 도쿄서적 교과서는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표현을 '위안부로 전지(戰地)에 보내졌다'는 표현으로 각각 바뀜.
- **내주 한일정상회담 개최될듯…위안부 합의 이행 재확인 전망(3/23, 연합뉴스)**
 - 23일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3월31일~ 4월1일)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전망됨.
 - 만약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연말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대면하는 것임.
 - 두 정상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정상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양국 관계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키는 관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 강화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임.

■ 위안부 재단설립은 '자연'...日강제성 부정행보는 '착착'(3/23, 연합뉴스)

- 22일 도쿄에서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위안부 합의 후 첫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지만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세우지 않았음.
- 합의 이행에 진전이 없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 보다는 주로 피해자들의 입장과 양국 정치 일정 때문으로 풀이됨.
- 아베 정권은 합의 이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합의를 통해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홍보하는 한편 군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희석 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 외교부 "소녀상 문제, 민감한 만큼 관련단체 의견청취할 것"(3/24, 연합뉴스)

- 외교부는 24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문제에 대해 "정부로서도 소녀상 문제가 국내적으로 갖는 민감성이나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가 소녀상(철거)문제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냐는 일본 언론의 질문에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함.

라. 한·러 관계

■ 통일차관-러시아 대사 면담...韓 "나진-하산, 北 태도에 달려"(3/23, 연합뉴스)

-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와 만나 우리 정부의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로 무기한 추진이 보류된 나진-하산 프로젝트(사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짐.
- 티모닌 대사는 황 차관에게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전망에 대해 문의했고, 황 차관은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우리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설명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함.

- 이번 면담은 티모닌 대사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 사람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마. 미·중 관계

■ 요미우리 “오바마-시진핑, 핵안보회의 때 양자 정상회담”(3/21,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이달 말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할 것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양국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21일 보도함.
- 오바마 대통령은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의 인공섬에 중국이 활주로를 설치하는 등 군사 거점화를 시도하는 것에 관해 시 주석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을 중단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알려짐.
- 시 주석은 작년 9월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할 때 중국이 인공섬을 군사 거점화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번에 이 문제에 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주목됨.

■ “미군, 조만간 필리핀에 병력 배치”…남중국해 中 견제 목적(3/21, 연합뉴스)

- 중국과 영유권을 놓고 긴장이 조성된 남중국해의 필리핀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조만간 병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함.
- 미군이 필리핀에 파병하는 것은 지난 1991년 필리핀 의회에서 미군 주둔 연장안을 부결시킨 이듬해 미군이 철수한 이후 처음임. 양국은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필리핀의 공군기지 4곳과 육군 부대 1곳을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함.
- 이들 기지에는 중국이 최근 군사장비를 대거 설치한 파라셀군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베트남명 호앙사 군도)의 우디 섬(중국명 융싱다오<永興島>)과 가까운 팔라완 섬의 안토니오 바티스타 공군 기지가 포함됨.

- **“美정부, ‘수출 금지’ 中기업 ZTE에 한시 제재 해제”(3/21,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사실상 수출 금지 제재 조치를 내렸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 <中興>통신)에 대해 한시적으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함.
 - 미국 상무부 고위 관계자는 WSJ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리고 ZTE가 미국 정부에 약속한 내용에 따라 상무부가 이번 주중에 한시적인 규제 완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 이 관계자는 ZTE와의 논의가 "활발하고 건설적"이라면서도 이번 제재 해제가 "한시적인 조치이고, 만약 ZTE가 미국 정부와의 약속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함.

- **中, 오바마 쿠바 방문에 걸으면 ‘환영’…내심 ‘촉각’(3/21, 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 프로세스는 좋은 일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환영 메시지를 전함.
 - 그러면서도 미국과 쿠바와의 관계 개선이 전통적으로 긴밀한 중국-쿠바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에도 촉각을 세웠음. 이어 "중국과 쿠바와의 관계 강화는 그 어떤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제3자가 중국-쿠바 간의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중국 언론들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88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도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임.

- **中 남중국해 우디섬에 대함 미사일도 배치…“美에 경고”(3/22, 연합뉴스)**
 - 중국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베트남명 호양사 군도)의 우디 섬(중국명 용싱다오(<永興島>))에 지대공 미사일 '홍치(紅旗·HQ)-9'를 배치한 데 이어 대함 미사일 '잉지(鷹擊·YJ)-62'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의 토마호크 반함 순항미사일과 디자인이 유사한 '잉지-62'는 사거리 300km로 중국의 대함 순항미사일 중에서는 사정거리가 가장 길며 5천~7천t급 구축

함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81군사는 전함.

- 81군사는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양자-62' 발사장면을 공개한 것은 중국의 영공과 영해 주권을 침범하는 미국을 향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라고 분석함.

■ **미국무차관 “中과 사드 한반도 배치 논의 희망”…中 사실상 거부(3/23, 연합뉴스)**

- 로즈 고테필러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담당 차관이 22일(현지시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싶다"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중국과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함.
- 고테필러 차관은 "사드는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것으로서 중국이 아니라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며 "순전히 배치되는 지역의 방어를 위한 것이며 중국이 우려할 정도로 요격 거리가 미치지 못한다"고 거듭 주장함.
- 중국은 이에 대해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이익을 훼손한다"며 이 제안을 사실상 거부함.

■ **미국방기밀 해킹한 중국인 사업가 유죄 인정…“F-22 · 35 포함”(3/24, 연합뉴스)**

- 미국 군수업체를 해킹해 전투기와 여객기 관련 정보를 빼낸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쑤빈(50)이라는 이름의 중국인 사업가가 23일(현지시간) 해킹 혐의를 시인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함.
- 존 칼린 미국 법무부 차관보는 "쑤빈은 우리 군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민감한 군사 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시인했다"며 "이번 유죄 인정은 미국과 미국 업체에서 정보를 훔치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함.
- 항공분야 사업가인 쑤빈은 지난 2014년 6월 캐나다에서 체포된 뒤 미국 법원에 기소됐는데,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 범죄를 놓고 긴장관계를 형성하던 중에 발생한 일이었음.

■ **백악관, 오바마-시진핑 핵안보회의기간 정상회담 공식발표(3/24, 연합뉴스)**

-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인 오는 31일(이하 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

- 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24일 발표함.
- 백악관은 "이번 회담은 광범위한 상호 이해관계에 대한 미-중 양국간 협력 증진의 기회"라며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이 건설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정치 분석가들은 백악관에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언급한 사안에 남중국해 문제와 사이버보안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지목했으며,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바. 미·일 관계

■ 일본, 플루토늄 미국 반환절차 개시...수송선 도착(3/21, 연합뉴스)

- 일본이 미국에 반환키로 한 플루토늄을 수송하는 영국 원전해체청(NDA) 산하 핵폐기물 수송 기업 PNT의 핵폐기물 운반선 2척이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가 있는 이바라키(茨城)현 도카이무라(東海村)에 도착했다고 AP통신과 교도통신 등이 21일 보도함.
- 핵무기 40~50개를 만들 수 있는 331kg 분량의 플루토늄은 냉전 시대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일본에 연구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일본과 미국은 지난 1월 미국에 반환하는 절차를 확정함.
- 이번 플루토늄 이송은 오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비확산 성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짐.

■ 日 오키나와 주민 화났다...미군 성폭행사건에 "떠나라"(3/22, 연합뉴스)

- 지난 13일 새벽 오키나와 주둔 미군이 일본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 때문에 일본 오키나와(沖縄)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음.
- 22일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21일에는 용의자가 근무하는 캠프 슈와브에 2천500여명의 주민이 모여 항의집회를 했음.
-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미군측의 재발방지책 및 기강확립 등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는 더는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없다"며 미일지위협정 개정 및 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함.

- **美주지사 "일본서 반환하는 플루토늄 안 받아...수송 중단하라"(3/25, 연합뉴스)**
 - 일본이 미국에 반환하는 연구용 플루토늄 등 핵물질을 수용할 핵시설이 있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지사가 수송 중단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니키 헤일리 주지사는 핵시설을 담당하는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 핵물질의 수송을 중단하든지,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음.
 - 헤일리 주지사는 "(핵물질이) 우리 주에 매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우리 주가 핵물질 최종 처분장이 되는 것은 주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사. 미·러 관계

- **마러 관계 해빙?...“케리 방러 우호적 분위기서 진행”(3/25,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잇따라 회담하고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국제현안과 양자 관계를 깊이 있게 논의함.
 - 무려 8시간 동안이나 이어진 두 차례 회담은 유례없이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회담 결과 양측은 시리아의 휴전 체제를 유지하면서 순조로운 정치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민스크 협정의 철저한 이행에 함께 힘쓰기로 합의함.
 - 케리 장관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전력을 감축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했다"며 최근 푸틴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을 높이 평가했고, 이에 푸틴 대통령은 "우리가 시리아에 관해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미국의 최고 지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덕분"이라고 화답함.

아. 중·일 관계

- **中, 日 역사교과서 검정결과에 강력 항의(3/22, 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일본 국내의 관련 동향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난징(南京)대학살 관련 내용을 축소하고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

한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 검정결과와 관련해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한 사실을 공개함.

- 화 대변인은 일본의 교과서를 통한 역사 미화는 역사를 직시하지 않는 잘못이 반영된 것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함.
- 그는 "일본이 책임 있는 자세로 역사를 직시하고 침략의 역사를 반성할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면서 정확한 역사관으로 젊은 세대를 가르칠 것을 요구함.

■ 방일 거부된 731부대 중국인 희생자 유족 日법원에 제소(3/25, 연합뉴스)

- 일본 입국 비자를 받으려다 거절당한 일본군 731부대 중국인 희생자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음.
- 25일 교도통신 등에 의하면, 중국인 희생자 유족 3명과 일본인 지원자들은 24일 일본 정부에 총 660만 엔(6천 825만 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 방재판소에 제기함.
- 소장에 의하면 중국인 원고들은 작년 11월 도쿄에서 과거사 직시와 집단 자위권 법 반대를 테마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하려 했지만 일본 정부가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아 입국을 못했음.

■ 日, 주중대사에 '중국통' 임명...“관계개선 의지 반영”(3/25,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25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주(駐)중국 대사에 '중국통'인 요코이 유타카(横井裕駐·61) 주터키 대사를 임명함.
- 일본내 중국통 인사가 주중 대사로 부임하는 것은 6년만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요코이 대사는 도쿄대 출신으로 1979년에 외무성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외무성 보도관 등을 거쳐 2013년 8월부터 터키대사로 근무했음.

자. 중·러 관계

■ 시진핑, 푸틴 측근에 “중·러는 최고의 전략협력동반자”(3/25,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방중한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장을 만나 "중러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협력동반자"라며 '러시아 중시' 메시지를 강하게 발신함.

- 시 주석은 "양국 간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양국 공통의 전략적 선택이자 각자의 외교적 우선 방향"이라고 "올해 양국 간 선린우호 협력 조약 체결 15주년을 맞아 양국 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양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하길 희망한다"고 말함.
- 이바노프 실장도 "양국 간 긴밀한 고위층 교류는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양국 간 분야별 협력과 국제문제에서의 밀접한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함.

차. 일·러 관계

- **우크라 대통령 내달초 방일…아베, 러-우크라 사이 ‘줄타기’(3/22,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달 5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힘.
 - 아베 총리가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포로셴코를 초청하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자신의 러시아 방문 및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서방의 견제를 완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됨.
 - 아베 총리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협상에서 성과를 거둘 목적으로 푸틴과의 정상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을 계기로 푸틴과 거리를 두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서방 지도자들은 아베의 이 같은 행보를 우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
- **러시아 “쿠릴 열도에 미사일 배치…해군기지 설치도 고려”(3/25, 연합뉴스)**
 - 러시아가 역내 군사력 증강 작업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쿠릴 열도에 해안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한다고 밝힘.
 - AP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25일 (현지시간) 국방부 회의에 참석해 "해안 미사일 시스템과 차세대 무인 항공기를 올해 쿠릴 열도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함.
 - 러시아 극동, 일본 북부의 태평양 해상에 있는 섬들인 쿠릴 열도는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나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으로, 쇼이구 장관은 이어 쿠릴 열도에 해군 기지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임.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유엔 ‘2014 북한 상수도 보급률 82.1%…“북한 물 공급 여전히 심각”(3/23, 미국의소리)
 - 유엔 산하 ‘유엔인구기금 UNFPA’는 2014년 현재 북한의 상수도 보급률은 82.1%로 조사됐다고 밝혔음.
 - 유엔인구기금은 지난 2014년 북한 중앙통계국과 공동으로 실시한 ‘경제·사회·인구·보건 조사(Socio Economic Demographic Health Survey, SDHS)’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음.
 - 당시 설문조사는 북한 11개 도 내 1만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각 도에서 평균 1천 250가구가 참여했음.
 -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북한의 상수도 보급률은 2008년 인구센서스에 비해 3%포인트 가량 감소했음.
 - 또 우물이나 우물에 설치된 펌프(Tube well/ Borehole with Pump)를 이용해 물을 얻는 비율은 10.5%로 나타났음.
 - 이 밖에 북한 주민 2%는 공동수도에서, 4.1%는 자연샘에서 물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전문가들은 북한에 상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긴 하지만 남한의 60~70년대 수준으로 매우 노후화돼 있고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황해남도 지역에서는 가뭄 등 물 부족으로 어린이 설사환자 수가 140% 증가했음.
 - 유니세프는 물이 부족한데다 수질도 나빠져 어린이들 사이에 설사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질병과 영양실조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위험도 높아졌다고 밝혔음.
 - 이같이 열악한 북한의 식수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 월드 비전,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 국제구호단체들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음.
- 중, 북중 국경 밀무역 이전 안 봐줘(3/25, 자유아시아방송)
 - 그동안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밀무역 행위를 적당히 눈감아주던 중국당국이 최근 밀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나섰다는 소식임.

- 북한은 지금까지 외화벌이를 위해 국가기관까지 동원해 밀무역에 개입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중국 단둥의 한 대북 소식통은 최근 “중국해관 당국이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압록강 일대와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뚩강(東港)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밀수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다수의 밀수꾼들을 체포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 소식통은 “체포된 밀수꾼들 중에는 몇 달 전에 저질렀던 밀수행위가 이제야 드러나서 체포된 사람들도 있다”면서 “밀수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발각되지만 않으면 체포되는 일이 없었는데 매우 이례적인 단속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단둥의 한 무역업자는 “북한은 지금까지 유엔 제재의 대상이 되는 물건들은 밀수를 통해 확보했다”면서 “밀거래로 북한에 들어가는 물자들은 대부분 군수물자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이 소식통은 “밀무역 단속이 길어지면 북한의 식량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중국은 쌀과 강냉이의 수출은 등록된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는 쌀과 강냉이는 대부분 밀무역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보위부, 고리대업자 단속 선포(3/2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장물(쓸모 있는 물건,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담보로 한 금전거래(사채놀이)를 엄중히 처벌한다”고 선포했음.
- 인민보안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을 보위부가 선포하고 나서 주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는 소식임.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3월 23일 “국가보위부가 ‘109상무’를 통해 ‘장물’을 담보로 한 금전사기꾼들에게 엄중히 경고했다”며 “앞으로 장물을 통한 금전거래가 적발되면 거래자의 재산을 몰수할 것이라고 선포했다”고 전했다.
- 애초 불법영상물을 통제할 목적으로 인민보안부(경찰) 내에 조직됐던 ‘109상무’와 산하 ‘대부무역회사’는 지난해 국가보위부 소속으로 넘겨졌음.
- 국가보위부에 소속된 ‘109상무’가 불법 영상물뿐 아니라 개인 간의 금전거래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임.
- 북한에서 장물을 담보로 한 금전거래는 ‘돈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돈주들이 돈이 급한 주민들에게 집과 댕기밭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을 경우,

- 담보로 잡힌 물건을 몰수한다는 조건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 북한에서는 본래 장물을 담보로 한 금전거래는 인민보안부가 담당해야 할 사법권에 속한다며 국가보위부가 '109상무'를 통해 개인들의 금전거래까지 통제하려 들면서 사법기관 간부들 속에서 보위부의 월권행위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언급했음.

2. 북한인권

- '걸어서 北인권·통일 기부' 행사에 600명 청춘들 모여(3/21, 데일리NK)
 - 3월 2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 600여 명의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북한인권학생연대(대표 문동희)가 개최한 '2016 통일유니워크'에 참가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음.
 - 이번 행사는 청계천 일대를 1m씩 걸을 때마다 1원이 적립돼 한사람이 코스를 완주하면 최대 3500원을 북한인권 개선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부한다는 취지로 기획됐음.
 - 우선 1시부터 열린 15개의 체험부스에서는 북한 교과서나 교복, 군복, 북한돈, 당원증 등 북한 물품전시와 통일약과, 음료수 등의 음식전시, 사진·영상전시가 진행됐음.
 - 또한 동전을 주머니에 넣고 뛰며 기부하는 기부방방과 룰렛게임, 북한의 3대 계층(핵심·동요·적대)을 '포춘 쿠키'로 뽑아보는 등의 체험도 진행됐음.
 - 본 행사인 '통일유니워크'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됐는데, 청계광장을 출발해 을지로 4가의 배오개다리를 반환점으로 돌아 다시 광장으로 오는 약 3.5km 코스를 완주한 참가자들이 확인증을 발급받으며 행사는 마무리 됐음.
-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전문가그룹 설치(3/24, 미국의소리)
 -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3월 23일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음.
 - 이로써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처음 결의안을 채택한 지난 2003년 이후 14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음.
 - 특히 올해는 지난 2013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표결 없이 결의안이 채택됐음.
 - 이날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이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밝혔지만 표결을 요청하지는 않았음.

-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문제를 다룰 독립적인 ‘전문가그룹’의 설치를 요청했음.
- 이를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최대 2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를 지명해, 이들이 6개월 동안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음.
- 전문가그룹에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접근법을 모색하고,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포함해 반인도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한 진실과 정의를 구현할 실질적인 절차들을 권고하도록 요청했음.
- 결의안은 또 서울에 설치된 유엔인권사무소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문제와 관련한 자료와 증거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음.
- 특히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대우를 폐지하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없애는 한편, 강제납치된 외국인 등을 즉각 되돌려 보낼 것을 요구했음.
- 결의안은 북한과 관계가 있는 유엔 회원국들에게는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제도적인 개혁에 착수하는 등 모든 인권 침해를 끝낼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권고했음.

■ 캐나다 상원서 북한인권 청문회 열려…“탈북난민 수용 촉구”(3/24, 미국의소리)

- ‘북한인권 상황과 탈북자’를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라는 제목의 자서전으로 널리 알려진 탈북 여성 이현서 씨는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는 일부 탈북자들의 문제를 거론했음.
-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한국에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희망을 갖고 견디지만, 막상 한국에 도착하면 아주 냉정한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임.
- 이 씨는 특히 탈북자들은 같은 민족인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차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들 중에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으로 떠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음.
- 이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탈북자들의 사정도 헤아려줄 것을 당부했음.
- 이 씨는 탈북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찾는 뒤에 다시 정착할 나라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많은 탈북자들이 캐나다로 가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인권재단 설립위원 첫 회의…9월까지 설립 목표(3/25, 연합뉴스)**

- 통일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설립위원 회의’를 3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처음으로 개최했음.
- 북한인권재단 설립위원 회의에는 통일부 황부기 차관과 기획재정부 조원경 대외경제협력관, 통일부 이덕행 통일정책협력관, 국무조정실 이인호 외교안보정책관, 법무부 주상용 통일법무과장, 연세대 홍성필 교수, 통일연구원 김수암 선임연구위원 등 7명이 참여했음.
- 이들은 오는 9월께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의 정관을 작성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정하게 됨.
-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 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
- 정부는 매년 200여억원 규모의 예산을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형태로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에 출연할 예정임.
- 북한인권재단이 설치되면 민·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인권단체(NGO)는 33곳으로, 북한인권재단은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북한인권단체가 참여하는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북한인권단체 간 네트워크도 강화할 계획임.
- 다만 12인 이내인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을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기 때문에 북한인권단체 지원금 배분을 놓고 재단 내에서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음.

■ **마·영,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환영(3/26, 미국의소리)**

- 제네바 주재 미국대표부의 키스 하퍼 대사가 3월 24일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음.
- 하퍼 대사는 회견에서 이번 이사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한 것을 높이 평가했음.
- 하퍼 대사는 중국이 결의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중국마저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이라는

-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이번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별도의 독립전문가 그룹을 신설하도록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음.
 - 인권 침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임.
 - 하퍼 대사는 또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북한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문제, 특히 고위 지도자들의 책임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한다는 것임.
 - 영국 외교부의 조이스 애널레이 부장관도 24일 유엔 인권이사회를 결산하는 연설에서, 이사회가 다시 한 번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애널레이 부장관은 특히 북한의 인권 침해에 초점을 맞춘 전문가그룹의 신설을 환영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문제에 계속 중점을 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3. 탈북자

- 특이동향 없음.

4. 이산가족

- 이산가족 상봉 한국 측 신청자, 절반 넘게 숨져(3/21, 미국의소리)
 -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한국 측 가족 가운데 북측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숨진 사람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북측 가족과의 상봉을 신청한 전체 한국 측 가족 13만800여 명 가운데 50.4%인 6만5천9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음.
 - 현재 한국에서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의 연령대는 90살 이상 13.8%를 포함해 절반이 넘는 57%가 80살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납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지구환경기금, 10년째 대북지원 안해(3/25, 자유아시아방송)
 - 지구환경기금측은 현재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없다고 3월 25일 전했다.
 -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의 환경보존과 개발 사업들을 지원한 이후 10년째 북한에 대한 지원 사업을 세우지 않고 있음.
 - 지구환경기금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환경계획(UNEP) 그리고 세계은행(IBRD) 등 유엔의 3개 기관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가난한 나라의 환경분야 투자와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함.
 - 지구환경기금측은 북한이 긴급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해당 정부로부터 지원 요청도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1990년 설립된 지구환경기금은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제안하는 환경기준 도입을 위한 1997년 4월 첫 지원부터 2005년 평안북도 철산군에 소형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지원까지 7개 사업에 총 350만 달러를 지원했음.
 - 이 기구의 관계자는 지구환경기금이 현재 북한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은 없지만, 북한은 이 지역의 환경관련 연구와 개발 사업의 혜택을 간접적으로 받는다고 덧붙였다.
- 독 연구소, 대북 농축산 통합 사업(3/25, 자유아시아방송)
 - 독일의 비정부단체 '유기 농업 연구소'(FiBL/Research Institute of Organic Agriculture)는 최근 북한의 농장 생산성을 높여 농민들에게 우유와 육류를 통한 지방과 단백질, 미량 영양소 등을 제공 한다는 목표로 '농축산 통합을 통한 영양 개선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3월 25일 밝혔다.

-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국의 북한 지원 책임 부서는 ‘유기 농업 연구소’와 북한 당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범농장에서 적은 예산을 들여 유기농법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이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이 단체는 이 사업을 통해 북한에서 생산되는 사료와 자재를 이용해, 가축을 먹이고 축사를 짓고 있다고 밝혔다.
- 평양 인근에 가축들이 먹이를 먹고 자고 이동하기에 알맞은 축사를 지어, 저예산으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 기술을 전달하고, 북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설명임.
- 이 밖에도 사업 방안, 기술 등의 개발 및 전수를 위해 기존 농장주들과도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기존 논문, 출판물 등을 검토하는 연구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임.
- 이에 더해, ‘유기 농업 연구소’는 북한 당국이 식량 생산량이 증대되는 유기농업에 매우 관심이 많아 적극적으로 협조, 장려하고 있으며, 북한 농업 전문가들도 유기농업 분야에서 해외의 지식과 기술, 경험을 배우려는 데 열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 정부, 고강도 대북 제재에도 ‘유진벨재단’ 대북지원·방북 승인(3/26, 데일리NK)

- 우리 정부가 유진벨 재단이 신청한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환자(중증환자)들을 위한 약품 반출과 방북을 승인했음.
-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조성된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처음 허용된 대북 인도적 지원임.
- 북한 내 결핵치료 지원사업을 해온 민간단체 유진벨재단은 3월 25일 “한반도의 긴장상태에도 불구하고 유진벨재단의 다제내성결핵(MDR-TB·중증결핵) 치료 사업을 위한 약품 및 관련 물품들이 북한에 잘 도착했다”고 밝혔음.
- 재단은 북한 내 환자 치료와 실태 점검을 위해 재단 관계자가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방북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 앞서 재단은 이달 초 정부의 대북 제재로 북한의 다제내성결핵 환자 1500명을 위한 치료약을 북한에 전달하지 못하게 됐다며 반출 승인을 요청했음.
- 재단에 따르면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은 18개월 동안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병세가 악화돼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XDR-TB)에 처하게 됨.

- 이들 환자가 '슈퍼 결핵'을 가족과 이웃 등 주변 사람들에게 옮길 위험성도 있는데, 현재 북한에는 해당 치료약이 다음 달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분량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 재무부 “일부 대북지원활동 행정명령 제외”(3/26, 미국의소리)

- 미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 OFAC은 오바마 대통령의 새 대북 행정명령 13722호와 관련해 발표한 최근 문건(General License No.5)에서, 대북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부 활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 여기에는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도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도적 사업 지원 활동과 북한 내 민주주의 구축 지원 활동, 교육 지원 활동,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비상업적 개발 사업 지원 활동, 그리고 환경보호 지원 활동이 포함됐다.
- 자산통제국은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송금도 승인된다고 밝혔다.
- 또 비정부기구들이 승인된 활동을 위해 북한 정부, 북한 노동당과의 거래에 관여하는 것도 승인된다고 밝혔다.
-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16일,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이 행정명령에는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과 광물 거래, 인권 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 수출과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조항이 적용됐다.

8. 북한동향

- 특이동향 없음.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